

# 문 대통령 “지역균형 뉴딜 강력 추진”

##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디지털·그린 뉴딜에 추가 지역 변화 강력 의지 혁신도시 등과 연계 균형발전 완성도 높일 것”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도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 중 절반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사가 참석했다.

에 달하는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이라며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다.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균형 뉴딜은 지역 주도로 창의적 발전 모델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앞장서고 기업과 지

역 주인이 함께한다면, 많은 모범사례와 성과가 창출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하여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은 기존의 국가균형정책과 연계하여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것이며,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만나며 고도화될 것”이라며 “지역밀착형 생활 SOC는 한국판 뉴딜과 결합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 뉴딜이 우리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나갈 기대한다”며 “지역

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균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하여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중앙과 지방 간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협업체계도 강력히 구축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도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업체 적발 건수 매년 ↑

작년 한해만 283건  
전년보다 1.8배 증가

전북지역 내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혜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적발 건수는 283건으로 2018년 152건에 비해 1.8배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29건, 경남 25건, 강원 22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전북은 2017년 3건, 2018년 4건에서 2019년 14건으로 급증했다. 이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손 소독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위험물은 조금만 잘못 취급해도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 160조 한국판 뉴딜에 75조 지역사업 추가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지방채 초과발행 신속 지원

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등 기존 3대 축 이외에 ‘지역 뉴딜’을 새롭게 추가해 추진한다. 75조3000억원(47%)은 지역사업 프로젝트로 배정한다. 뉴딜 공모사업에는 각 지자체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지역 발전도에 따라 차등된 가점을 부여하며 분야별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해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논의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을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전략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연속회의로 이뤄졌다. 한국판 뉴딜이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한 선도형 경제체제 전환 사업으로,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10대 대표사업으로는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 있다. 기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상 총 160조원의 투자재원 중 국비가 114조1000억원(71.3%), 지방비는 25조2000억원(15.6%)이다. 민간이 부담하는 재원이 20조7000억원(12.9%) 수준이다. 프로젝트 기준으로는 지역사업이 75조3000억원(47%)을 차지한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한국판 뉴딜 160조원 중 75조3000억원(47%)을 지역사업으로 배정한다. 이중 디지털뉴딜은 58조2000억원 중 24조5000억원(42%), 그린 뉴딜은 73조4000억원 중 50조8000억원(69%)이다. 중앙정부 프로젝트는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구축 지원 ▲철도 안전시설·지하 공동구 스마트화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있으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투자에 매칭

하는 프로젝트로는 ▲그린스마트스쿨 ▲첨단 도로교통체계 구축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가 특성을 살려 스스로 발굴·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현재 광역지자체 11개, 기초 지자체 125개가 지역뉴딜을 구상하거나 계획을 수립 중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지역발전도를 고려해 가점을 부여한다. 11월에는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해 확대하고 2021년에는 경제자유구역별 뉴딜 분야 핵심전략사업을 선정한다. 또한 2021년부터 시·도별 주력산업 디지털·그린 중심으로 재편하고, 디지털·그린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는 현재 2%에서 10%로 확대한다. 2021년부터 뉴딜 우수지자체에는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년부터 뉴딜 사업 추진 관련 지방채는 초과발행도 신속 지원한다. 2021~2022년 지방기업펀드는 뉴딜 관련 지역 혁신기업에 2000억원을 중점투자한다. 이년부터 지역산업협력펀드를 조성한다. /뉴시스

## “소방헬기 조종·정비사 절반 이상, 비행복 없이 출동”

민주 한병도 의원 ‘비행복 미지급 지자체에 전북도 포함’

소방헬기를 운영하는 조종사와 정비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행복을 지급하고 있지 못하는 지자체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



북 익산시)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행복 지급은 전국 221명 조종사 및 정비사에게 모두 지급되어야 했지만 지급률은 49%에 불과했다. 소방공무원 비행복은 ‘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제8조에 의거해 선택품목으로 분류, 비행 등 특수업무를 수행할 때 지급하도록 돼있다. 단 한 벌의 비행복도 지급되지 않

는 곳은 중앙, 대구, 인천, 대전,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등 9곳이었다. 이 중에서 올해 비행복 구매 관련 예산은 강원도만 편성되었을 뿐 나머지 8곳은 여전히 비행복 관련 예산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 장비 하나하나가 화재 진압에 맞서는 소방관의 방패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최우선적으로 구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작물 신제품 개발·보급 시급”

민주 이원택 의원 “최근 4년동안 39.9%에 그쳐”

국산 농작물의 신제품 개발, 보급을 통해 국산 농작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농산물 신제품 개발 및 보급 사업이 최근 4년간 1,114억원을 사용하고도 실제 보급률은 39.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

제, 부안)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최근 4년간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 301건의 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급률은 39.9%에 그치고 있었다. 식량작물 57.4%를 제외하면 원예, 특용, 사료농비, 잡사/양

봉의 신제품들의 보급률은 50% 미만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은 “신제품 농작물에 대한 개발과 보급은 FTA에 대한 우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라며 “신제품 개발 사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식량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농진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신제품 개발, 보급, 확산을 통해 우리 땅에 우리 농산물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1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

## 도의회 임사회 도정·교육행정 질문

### “감사 전문성·독립성·자율성 확대를”

김대중 도의원, 감사위원회 도입 제안  
전북형 뉴딜 맞춤형 전략 수립도 주장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정우2)이 13일 제376회 임사회 2차 분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대중 의원은 도정에 관련, 송하진 도지사에게 감사 전문성·독립성·자율성 확대를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을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가 날로 확대되는 만큼 이에 따른 책임성 역시 강화돼야 하지만 현재의 독립제 감사기구로는 이해관계, 위계 등 다양한 변수가 감사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 확대를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에 대응해 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북형 뉴딜 사업과 관련, 맞춤형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분야 대응이 전북형 뉴딜의 성패를 좌우할 수밖에 없는데 관련 기업과 인체가 부족한 전북도로서는 얻을 것이 많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한편 김대중 의원은 교육·학예 행정과 관련, 김승환 교육감에게 도교육청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데 이를 관리, 감시할 시스템이 부재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한원수 도의원 “안전행정 대대적 개선”

전북도의회 한원수 의원(임실군)이 전북도 안전행정의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수급과 관련된 전북도가 수립한 도내 지방하천 기본계획의 경우 대부분 설계빈도가 50년으로 동일하다며 설계빈도 설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시설 선정 미흡 및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시설이지만 관리주체가 불분명해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안되는 소규모 공공시설 등 소규모 시설과 관련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위험시설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규모를 확대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만기 도의원 “군산~목포 철도 건설”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제1차(2006-2015)에서부터 제3차(2016-2025)까지 총 18건을 신청했으나 새만금인입철도(새만금-대야) 단 한 건만 반영, 나머지 17건 모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13일 전북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에서 김만기 의원(고창2, 예산결산특별위원)의 도정질문을 통해 드러났다. 김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제4차(2021-2030)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새만금(군산-목포), 전주-김천, 전라선 고속화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선 등 6건을 신청했는데 이번엔 반드시 채택되도록 이전과 다른 정교하고 짜임새 있는 추진전략과 계획수립을 촉구했다.

### 최훈열 도의원 “부안 신재생단지 기업유치”

지난 10년 동안 기업유치 실적을 한 건도 올리지 못하고 매년 운영비 예산만 축내고 있는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의 관리 감독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훈열(부안) 의원은 13일 “2011년에 개장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지난 10년 동안 이렇다 할 투자유치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지금도 초저조한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면서 매년 10억 원의 예산만 축내는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최훈열 의원은 “10년을 끌어온 미분양 사태,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는 곳이 없어 답답할 노릇이며 더는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전북도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 김정수 도의원 “도교육청 공직기강 해이”



김승환 교육감이 3기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도교육청의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제376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김정수(익산2·교육위) 의원은 “최근 도교육청 내부에서 인사정보가 유출되는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며 “조직 내부결재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질타했다. 최근 도교육청에서 인사부서 담당직원이 다른 직원들의 인사정보를 특정직원에 유출하고 이를 취득한 직원은 해당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해 도교육청 내부감사가 이뤄진 것이다. 김정수 의원은 “교육감 3선 임기가 절반을 훌쩍 넘기고 있는 시점에 다시 한번 공직문화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감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